

EU Brief

| 월간 EU 동향 |

- 동유럽의 금융 불안 상황에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역할
The role of the EBRD during the economic downturn in Eastern Europe
- 바호주 재선임 및 리스본조약 비준
Reelection of Barroso as the European Commission president and Lisbon Treaty Referendum
- 한-EU FTA와 자동차산업
Korea-EU FTA and its effects on their automobile industry
- 고부가가치화로 생존을 모색하는 EU 철강산업
EU's steel industry tries to survive by specialising in premium products
- EU의 역내 국가보조제도
Critiques on European government's support programmes

SATOSHI KIMURA 삼성경제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15번지
삼성생명 서초타워 28층

Phone: 3780-8306

Fax: 3780-8009

www.yonseri.org



EUROPEAN COMMISSION
External Relations



Yonsei-SERI EU Centre

	EU Economy	
	동유럽의 금융 불안 상황에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역할 002	002
	The role of the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during the economic downturn in Eastern Europe	
	유럽중앙은행의 커버드본드(CB) 매입 결정의 배경과 효과 005	005
	Background and effects of the European Central Bank's covered bond purchase programme	
	EU Politics	
	바호주 재선임 및 리스본조약 비준 008	008
	Reelection of Barroso as the European Commission president and Lisbon Treaty Referendum	
	Trade Issues	
	한-EU FTA와 자동차산업 012	012
	Korea-EU FTA and its effects on their automobile industry	
	Industry Trends	
	고부가가치화로 생존을 모색하는 EU 철강산업 016	016
	EU's steel industry tries to survive by specialising in premium products	
	EU Law	
	EU의 역내 국가보조제도 018	018
	Critiques on European government's support programmes	
	Social Issues	
	유럽인의 행복의 조건 022	022
	What makes Europeans happy?: A search for Europeans' 'joie de vivre'	
	Report Review	
	2020년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이루기 위한 EU의 노력 026	026
	Europe's efforts to meet its 2020 renewables targets	
	EU Centre news	
	제3회 EU Core Circle Society 세미나 028	028
	The 3 rd EU Core Circle Society Seminar	

동유럽의 금융 불안 상황에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역할

The role of the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during the economic downturn in Eastern Europe

The EBRD is an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sation that was founded in 1991 with an aim of supporting the economic liberalisation and the transition to democratic market economy in Russia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The main goal of the EBRD is to promote the integration process of these countries and it provides technical assistance for the development of governance, and support for the budget management and technology attainment. As the Eastern European countries face a severe economic downturn during the current economic crisis, the EBRD has found a new role of protecting them from external shocks.

EBRD는 동유럽의 체제전환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은 소련 및 동유럽권의 체제전환을 지원할 목적으로 1991년에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EBRD는 소련 및 동유럽권 국가를 국제사회에 편입시키기 위해 시장경제 및 법·제도 구축 지원, 재정 지원, 기술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이 지역 국가들의 가격자유화, 무역자유화, 기업 구조조정, 사유화 정도 등에 관한 지수를 발표하고, 금융산업의 선진화 및 공공투자를 지원하는 등 체제전환을 독려하고 있다.¹ 특히 대형·국영 기업 위주의 경제체제 일변도인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에서 800여 개의 중·소규모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며 중소기업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

EBRD의 투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개발 자금을 해당 정부에 지원하는 IMF의 프로그램과는 달리 개별 프로젝트에 직접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을 취한다. 둘째, 금융, 유통망 등 인프라 중심의 투자에 집중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간산업에 집중한다. 셋째, EBRD 자금의 상당 부분은 동유럽뿐 아니라 동유럽에 진출한 서유럽 기업에도 제공된다. 넷째, 동유럽의 환경 기준

이 향상될 경우 지중해·발트해 오염이나 산성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환경시설에 대한 투자에 큰 비중을 배분한다.²

현재 EU와 회원국들은 물론 미국, 일본 등 61개국 정부가 관할하고 있으며, 투자 대상국으로는 동유럽 및 구소련의 약 30개국이 지정되어 있다.

★ EBRD의 주요국에 대한 지분 비율

국가	비중	비고
EU 27개국	62.7%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8.6% EC, EIB 포함 다른 국가: 3%
EU를 제외한 EBRD 투자대상국	7.3%	러시아: 4%
미국	10.1%	-
일본	8.6%	-
기타	11.3%	-

자료: 장형수, 송정호, 임을출 (2008),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서울: 통일연구원.

신속한 자금 및 투자 지원을 통해

동유럽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동유럽 경제가 흔들리자 EBRD는 동유럽 국가들을 지원해야 하는 임무를 새롭게 맡게 되었다. 이에 따라 EBRD는 이번 동유럽 금융위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한 국제기구 중

하나로 꼽힌다.

동유럽 금융 불안이 정점에 달했던 지난 2월에는 세계은행, 유럽투자은행(EIB) 등과 함께 향후 2년간 245억 유로를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동유럽 지역의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도 했다. 일례로 EBRD는 이탈리아 은행 유니크레디트의 동유럽 자회사에 대출 등을 통해 총 4억 3,240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동유럽 금융권을 살리기 위한 신속한 조치였다. EBRD의 조치에 따라 유니크레디트의 불가리아 지점은 5,000만 유로를 지원받았으며, 나머지는 헝가리,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우크라이나 등 8개국의 지점들로 배분되었다. 실제로 지난 1/4분기에는 동유럽 지역에 11억 유로를 지원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수치이다.³ 또한 2009년 총 투입 예정 금액은 전년보다 52% 증가한 80억 유로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EBRD는 금융위기가 지금까지 어렵게 추진되어온 구공산권 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 자체를 물거품으로 만들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금융 기관에 대한 자본투입뿐 아니라 과감한 공공투자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동유럽 지역의 중소기업들을 위한 대출사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금융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발트 국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10년까지 발트 국가의 금융 및 에너지 등 산업에 5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자본 확충을 통해 경제위기에 대비할 계획

현재 EBRD의 자본금은 200억 유로이다. 투자 자금의 60%는 민간부문(합자회사 설립, 기업 민영화 등)에, 40%는 공공부문(인프라 구축 등)에 투입된다. EBRD는 2008년 약 6억 유로 규모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EBRD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1998년 아시아

³ 2008년 1/4분기 동유럽 지원액은 6억 7,800억 유로

· 러시아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이는 2007년 19억 유로 순이익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EBRD는 금융위기로 타격을 입은 동유럽을 지원하기 위해 EU를 비롯한 회원국들에게 100억 유로의 추가 출자를 요구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동유럽 지역에 대출을 확대하고 민간자본 감소를 막는 데 쓰기 위해서이다. 100억 유로가 추가 출자될 경우, 연간 90억~100억 유로의 대출이 가능하다. 여기에 민간 출자까지 더해진다면 추가 자본 확충 규모가 최대 60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토머스 미로 EBRD 총재는 동유럽 경제가 안정을 찾기 시작했지만 회복이 균등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회복세가 시작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른 상태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동유럽은 여전히 위기 상태이며, 광범위한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동유럽 지역 은행들이 외국자본에 의지해 발전해오다가 이제는 전적으로 자신들의 재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면서 장기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에 있어 EBRD의 의미

EBRD는 한국경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EBRD는 한국이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로 진출하는 데 꼭 필요한 기관이다.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늘림과 동시에 국내기업이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에 진출해 사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정부는 그동안 EBRD에 3차례에 걸쳐 모두 210만 달러를 출연했다. 최근에는 동유럽 체제전환 국가를 지원하는 EBRD 기술협력기금에 66억 원을 출연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둘째, EBRD가 한국에게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북한의 체제전환 때문이다. 북한이 향후 체제전환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EBRD의 직접적인 참여를 기

¹ EBRD, Transition Report, 1994-2009년 각 연도.

² 장형수, 송정호, 임을출 (2008),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서울: 통일연구원.



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유럽 지원 사례를 한국의 롤모델로 삼을 수도 있다. 실제로 EBRD의 지원대상은 ‘유럽 또는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체제전환국’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EBRD는 북한 지원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⁴ 더구나 한국이 지분참여 국가이므로 북한도 큰 문제 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국제정치에서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등 정치적 이슈가 해결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EBRD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북한 철도를 시베리아 또는 중국 철도와 연결하는 사업, 기업 민영화, 인력 육성 등의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⁵ 무엇보다도 향후 북한의 체제전환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한국정부에게 있어 EBRD의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원에 대한 성과는 중요한 선례를 제공할 것이다. ★

이종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⁴ 지리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몽골을 지원할 때 회원국 전체 동의하에 승인된 사례가 있다.

⁵ 장형수, 송정호, 임을출 (2008),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서울: 통일연구원.

유럽중앙은행의 커버드본드(CB) 매입 결정의 배경과 효과

Background and effects of the European Central Bank's covered bond purchase programme

The European Central Bank (ECB) decided to buy euro-denominated covered bonds in January, 2009 in order to minimise the loss of the Eurozone banks. After devising a specific plan until March, the central bank has agreed to buy 60 billion Euros worth of CB since July. Europe had not adopted the policy of quantitative easing while providing financial support through fiscal policies, but the CB purchase program is an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that has a similar effect of printing money. Here we explore the main issues regarding these programmes and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CB market.

유럽중앙은행은 2009년 1월 유로존 은행들의 손실을 해결하기 위해 커버드본드(Covered bond: CB) 매입을 통한 양적 완화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3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었고, 1년간 총 600억 유로 규모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미국이 일찍이 국채매입을 통해 자국 은행들의 손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과 달리 유럽은 재정정책을 통해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국채매입을 통한 양적 완화 조치는 단행하지 않았다. 이는 유럽 국가들이 양적 완화 조치에 대한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CB 시장의 개념

CB는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담보자산의 범위는 모기지(주거용, 상업용) 대출, 공공부문 대출, 선박 대출 등 일부 우량자산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 상품에 대한 주요 투자자는 은행, 머니 매니저, 해외 중앙은행 및 정부기관, 보험 및 연금 등이다. 이 가운데 2005~2007년 평균으로 살펴보면 은행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대형 투자자이다.

한편 CB는 주로 담보자산을 근거로 은행(모기지 은행이나 상업은행 등)이 발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발행 방식은 크게 일반법과 특별법에 기반해 양분된다. 주로 사용되는 것은 특별법에 의한 방식으로 독일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별도로 인가받은

모기지 은행과 상업은행이 발행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특별법과 일반법 모두가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한 경우 특수 신용기관인 Sociétés de crédit foncier 및 CRH(Caisse de Refinancement de l'habitat)가 발행하며, 일반법에 의한 경우 은행이 특별목적법인(Special Purpose Vehicle: SPV)을 설립하여 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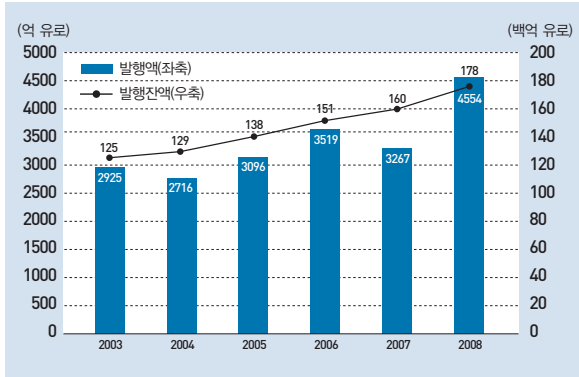
CB 시장 현황

CB 발행은 1770년 독일(프로시아)이 토지를 담보로 발행한 채권이 그 효시이다. 유럽 경제통합의 가속화와 더불어 제도가 정비되고 유로화의 도입과 금융시장 통합의 진전 등으로 인해 1990년대 중반 이후 증가세를 보이면서 2008년 현재 약 4,500억 유로의 발행 규모와 약 1조 7800억 유로의 잔액 규모로 증가하였다. 특히 주택경기가 호조를 이루면서 모기지 대출 부문을 통한 CB 발행이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점보 CB’⁶가 신규 발행되면서 정보관리기관의 필요에 의해 유럽은 2004년 11월에 European Covered Bond Council(ECBC)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⁶ 1회 총 발행규모가 최소 10억 유로 이상이며 채권의 최소 액면가가 1,500만 유로



★ 유럽의 CB 발행 추이



주: 유로존 + 영국
자료: European Covered Bond Council

CB의 특징과 장점

CB의 특징으로는 첫째, 담보자산의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CB와 유사한 자산인 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 ABS)의 경우 담보자산이 부실화되어도 자산을 교체할 수 없다. 이와 달리 CB는 발행자가 수시로 부실자산을 건전자산으로 교체할 수 있다. 둘째, 발행 목적이 자금조달만으로 제한되어 있다. ABS의 경우 자금조달 외에도 자산의 신용위험 회피, 위험자산에 대한 자본금 규제 회피 등 발행 목적이 다양하다. 셋째, 발행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자산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발행기관이 된다. 이와 달리 ABS는 보유자산을 양도받은 특수목적법인(SPV)이 발행기관이 된다. 마지막으로 대부분 고정금리로 발행되며 조기상환이 불가능하다. 발행방식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이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고정금리로 발행되고 있다. 이와 달리 ABS는 대부분 변동금리로 발행되고 있다. 또한 조기상환이 가능한 ABS와 달리 CB는 조기상환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CB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발행자 및 담보자산을 엄격히 제한하는 까닭에 국제수준의 높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CB의 약 95%가 AAA 등급을 받고 있다. 따라서 높은 신용등급에 상응하여 자금조달비용이 저렴

한 편이다. 둘째, 중장기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만큼 중장기대출로 활용함으로써 만기불일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유럽계 은행들은 자기자본비용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자본조달을 시행하는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CB 시장을 선택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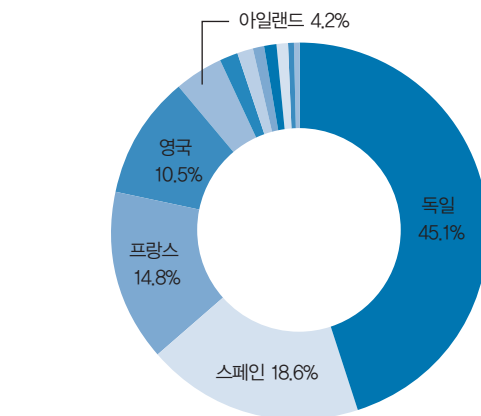
유럽중앙은행이 유럽계 은행의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CB 시장을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 경제적 이유 외에도 정치적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첫째, 금융시장의 비대칭적 상황에서 가장 큰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현재 CB 시장은 금융위기 이후 시장위축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의 트리셰 총재 역시 금융위기 이후 가장 위축된 시장이 CB 시장이기 때문에 동 부문에 대한 자산매입을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둘째, 미국이 국채매입을 통해 양적 완화를 실시한 것과 달리 EU가 특정 국가의 국채(정부채)를 매입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합의점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은 사항이다. 결국 긴 논의 끝에 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셋째, EU 내 양적 완화 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재정적자 문제와 연결하여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독일이 양적 완화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번 CB 매입을 통해 양적 완화를 실시하는 것은 독일의 반대를 극복하고 이루어진 결정이다. 그만큼 독일 측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가능한 일이었다.

이번 결정에서 독일과 여타 주요 회원국들 간에 어떤 협상이 이루어졌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다만 현재 CB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독일이라는 사실만은 확실하다. 결국 ECB의 CB 매입 결정은 은행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양적 완화보다는 재정정책 활용을 선호하는 기존 EU의 정책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유로화 표시 CB 발행 현황(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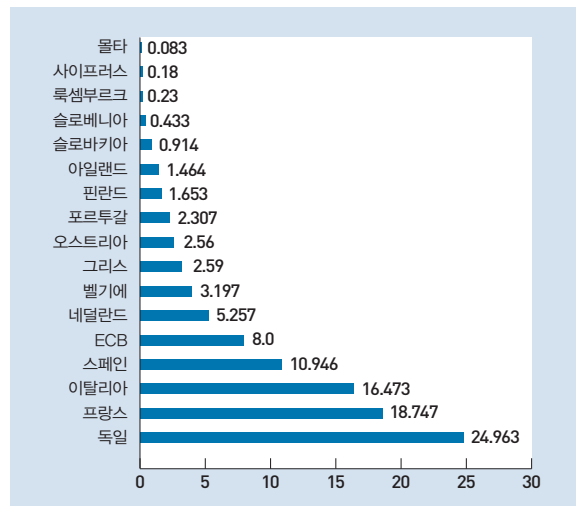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vered Bond Council

집행 현황

CB 매입은 ECB와 16개 회원국 중앙은행이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ECB가 직접 매입하는 몫은 600억 유로 가운데 8%(48억 유로)로 계획되어 있다. 나머지 552억 유로는 개별 중앙은행들이 담당하게 된다. 개별 중앙은행의 분담액은 ECB 자본금(capital stock)의 비중에 따라 배분되었다.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중앙은행

★ 개별 중앙은행 CB매입 할당량 비교



자료: European Covered Bond Council

이 Top 5로서 가장 큰 몫을 배정받았다. 이들 다섯 개 은행이 차지한 몫은 ECB 자본금의 58%에 해당된다.

지난 7월 6일부터 ECB와 중앙은행들은 CB 매입을 시작했으며 2010년 6월까지 12개월 동안 매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애초 설정된 600억 유로를 모두 사용하게 될 지는 미지수다. 2009년 8월 10일 현재 ECB와 회원국 중앙은행들이 매입한 CB 규모는 56억 9천만 유로인데, 이는 600억 유로를 소진할 경우 지출해야 하는 일일 평균 매입량(약 1억 6천만 유로)에 상응하는 규모이다.

기대효과 및 전망

CB 시장이 지닌 특성과 현황으로 인해 이번 유럽중앙은행의 결정은 몇 가지 정치경제적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 CB 발행과 보유에 있어서 특정 국가(독일)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따라서 CB 매입은 특정 국가에게 집중적으로 그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둘째, 은행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CB 시장의 주요 투자자는 은행이며, 은행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50% 이상에 달한다. 따라서 이번 유럽중앙은행의 CB 매입 결정은 은행에게 유동성을 공급하여 부실 자산을 청산하는 데 직·간접적인 자금조달 재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유럽 경기 회복 상황에 따라 CB 매입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현재 EU는 계속되는 높은 실업률과 가계 및 기업대출의 위축으로 경기 회복세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CB 매입 결정은 유럽 경기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려진 양적 완화 정책인 만큼 향후 유럽 경기의 회복 속도에 따라 현재 600억 유로 규모에서 확대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출구전략의 조기 시행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하겠다. ★

양오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바호주 재신임 및 리스본조약 비준

Reelection of Barroso as the European Commission president and Lisbon Treaty Referendum

José Manuel Barroso was reelected after securing 382 votes in his favour, 219 against and 117 abstentions in the European Parliament, on the 16th of September, 2009. Barroso will continue to lead the Commission until October, 2014. Ireland approved the Lisbon treaty in a second referendum in October and these two major events are going to accelerate the political integration of the European Union, which was somewhat stalled in recent years.

2009년 9월 16일 유럽의회는 바호주 EU 집행위원장 승인 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382표, 반대 219표, 기권 117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중도 보수성향의 포르투갈 총리 출신으로 2004년 11월부터 지난 5년간 EU 집행위원장을 역임했던 바호주(Barroso)가 재임에 성공하여 2014년 10월까지 EU 집행위원회를 이끌게 되었다.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리스본 대학에서 법학, 스위스 제네바 대학에서 유럽학, 정치학을 전공하고,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룩셈부르크 Inter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피렌체 The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수학하고, 포르투갈 Lusíada 대학교에서 학과장이 되었다.

바호주는 일찍부터 현실정치 참여를 시작하였다. 1974년 4월 25일 카네이션 혁명 이전에 학내에서 ‘마요쩌둥주의’ 지하운동 세력인 MRPP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1980년 바호주는 중도우파로 전향하여 사회민주당에 입당하였다. 포르투갈의 사회민주당은 다른 유럽의 사회민주당과는 달리 우파 정당이다. 시민당은 유럽의회에서도 독일 시민당 등이 위치한 PES(사회민주당) 그룹이 아니라 우파인 EPP(유럽국민당) 그룹에 속해 있다.

바호주는 시민당에 입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985년부터 6차례나 총선에 당선되어 6선 의원이 되

었다. 당내에서도 정치력을 발휘하여 정책위원회 위원, 국제관계위원회 의장, 그리고 1999년에는 사회민주당 의장으로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되어 3차례 더 연임하였다.

정부 요직으로는 내무장관과 외무장관을 거쳐 2002년 4월 포르투갈 총리에 취임했다. 총리가 된 후, 유로존의 재정적자 비율을 3% 상한선에 맞추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공공지출을 축소하여 좌파와 공무원 조직의 반발을 샀다. 바호주의 정책에 대한 반발로 2005년 선거에서 당시 연립연당이었던 사회당/인민당은 포르투갈 사회당에 정권을 내주게 되었다.

그리고 바호주는 2004년 6월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 EU 정상회담)에서 EU 집행위원장으로 지명되어 총리직 임기가 다 끝나지 않은 2004년 7월 5일에 EU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었다. 바호주는 당시 주요 정책 공약으로 EU와 미국의 관계를 개선하고 EU 정책에 대한 EU 시민들의 정치적인 지지와 정당성을 이끌어내겠다고 공언하였다.

2004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 EU 시민은 우파에게 더 많은 지지표를 던졌다. 유럽의회에서 최대 다수 그룹인 EPD-ED(보수당-기독교민주당) 계열은 바호주의 임명을 지지하였다. 반면, PES 그룹의 수장인 폴 뉘롭 래스뮌센(Poul Nyrup Rasmussen)은 “EU를 우리가 지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의도를 가진 후보에게 신뢰와 정치적인 지지를 보낼 수 없

다”며 바호주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바호주가 EU 차원의 프로젝트를 발전시킨 경험이 많지 않고 유럽의 경쟁력 강화와 유럽에서의 사회적 책임 및 사회보장이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신념이 부족하다며 비판하였다.

★ 2004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

EPD-ED	Conservatives and Christian Democrats	268
PES	Social Democrats	200
ALDE	Liberals and Liberal Democrats	88
G-EFA	Greens and Regionalists	42
EUL-NGL	Communists and the Far Left	41
ID	Eurosceptics	37
UEN	National Conservatives	27
NI	Independents	29

자료: European Parliament

바호주는 2004년 6월 유럽이사회 결정 이전에는 강력한 후보가 아니었다. 그보다는 벨기에에 Flemish Liberals and Democrats(자민당) 출신 총리인 가이 베르호프스타트(Guy Verhofstadt)나 영국 보수당 출신의 대외관계담당 EU 집행위원인 크리스 패튼(Chris Patten)이 유력한 후보였다. 베르호프스타트는 프랑스와 독일 정부의 지지를 받았다. 베르호프스타트는 미국으로부터의 독자적인 군사력을 발전시키고, 유럽의 ‘독립’을 추구했다. 그러나 유럽의 친미국가들이 베르호프스타트의 지명을 반대했다. 패튼에 대해서는 프랑스 대통령 자크 시라크(Jacques Chirac)가 반대하였다. 그는 패튼의 지명에 대해서 유로화 같은 유럽 정책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에서 후보를 받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또한 시라크 대통령은 EU 집행위원장은 반드시 불어를 해야 하고, 유로존 가입국(영국은 회원국이 아님) 및 쉥겐(Schengen) 협약(영국은 회원국이 아님) 가입국에서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바호주가 유럽이사회에서 어부지리로 EU 집행위원장으로 지명되었고, 당시 유럽의회에서 최대 다수 그룹이었던 EPD-ED 계열이 바호주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바호주는 포르투갈 총리 시절 미국의 이라크전을 지지하고 영국, 스페인, 동유럽 국가와 함께 ‘새로운 유럽’ 블록을 형성하는 등 친미적인 정치성향을 보였다.

바호주가 EU 집행위원장이 된 후, EU에서 논의된 주요 어젠다는 터키의 EU 가입 문제, EU 내에서 서비스 분야의 단일시장을 강화하기 위한 볼켄스틴 지침(Bolkestein directive), 2010년까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지속가능한 지식기반 경제 구축을 목표로 2000년부터 추진된 리스본 전략, WTO 도하라운드 협상, 기후 변화 문제와 리스본조약을 통한 제도 개혁 문제였다.

이 중 터키의 EU 가입 문제는 아직도 교착상태에 있고,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려던 볼켄스틴 지침은 노동단체가 강한 반발을 일으켜 프랑스에서 2005년 유럽헌법조약이 부결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리스본 전략은 역시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제대로 추진이 되지 못하였다. WTO 도하라운드 협상은 EU와 미국이 농업보조금 문제에서 타결점을 찾지 못하여 2006년 7월 이후 중단되었다. 그리고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과 1957년 로마조약을 개정할 목적으로 2004년 6월 유럽이사회에서 합의된

★ 프랑스의 유럽헌법 국민투표 결과(2005년 5월 29일)

찬성	12,806,394	45.32%
반대	15,450,279	54.68%
투표자	28,256,673	100%

자료: European Parliament

★ 네덜란드의 유럽헌법 국민투표 결과(2005년 6월 1일)

찬성	2,940,730	38.5%
반대	4,705,685	61.5%
투표자	7,646,415	100%

자료: European Parliament





유럽헌법조약은 각국의 비준 과정에서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 부결로 좌절되었다.

지난 5년간 바호주의 집행위원회는 EU 정책을 실현하는 데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역내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느라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해 눈에 띄는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나마 바호주의 리더십이 발휘된 것은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제안한 「미니 헌법」에 대해 강한 지지를 보이고, EU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미니 헌법」에 대한 비준을 끝낸 것이다.

2006년 9월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유력 후보자 시절,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국민투표 부결로 사각된 유럽헌법조약을 살리기 위해 국민투표가 필요한 유럽헌법조약 대신 범위를 축소한 ‘미니 조약’ 체결을 주장하였다. 이는 지난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유럽헌법조약이 부결되었던 것을 의식해 국민투표 없이 유럽헌법조약을 비준하기 위한 것이다.

2007년 5월 16일 대통령 당선 직후 사르코지는 EU 의장국이던 독일로 가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미니 헌법」 구상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고, 앙겔라 메르켈은 이에 동의를 표하였다. 사르코지는 5월 23일 브뤼셀의 EU 집행위원회를 방문하여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에게 그의 「미니 헌법」 구상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상호 ‘컨센서스(Consensus)’를 갖게 되었다고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후 사르코지 대통령의 「미니 헌법」 구상은 메르켈 총리와 바호주 집행위원장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회원국의 동의를 얻었고, 2007년 10월 19일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리스본조약이라 불리는 ‘개정조약(Reform Treaty)’을 승인하였다. 리스본조약을 통해 현재 6개월마다 EU 회원국이 번갈아 맡던 순회의장국 제도를 없애고 상임 의장인 EU 대통령 직책을 신설하였다. 2년 6개월 임기의 EU 대통령직은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또한 외무장관에 해당하

는 5년 임기의 외교정책 고위대표직도 신설되었다.

리스본조약은 현재 회원국별로 1명씩 총 27명인 EU 집행위원회의 집행위원 숫자를 오는 2014년 이후엔 18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EU 각료이사회에서 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 방식의 의사결정이 만장일치 방식으로 확대되는 것을 포함하여 의사결정 방식의 효율성을 증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리스본조약에 대한 각국의 비준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국민투표에 걸려 좌초한 유럽헌법조약과는 달리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의회 비준만 거치면 되므로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일랜드는 국내법 때문에 리스본조약에 대해 2008년 6월 13일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부결이었고 이로 인해 또다시 유럽 통합의 진전에 장애가 발생하였다. 조약이 부결된 이유는 아일랜드 유권자들이아일랜드의 독립성과 영향력, 법인세 체제, 낙태 금지 정책 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또한 조약에 대한 유권자의 이해부족도 거부감을 부추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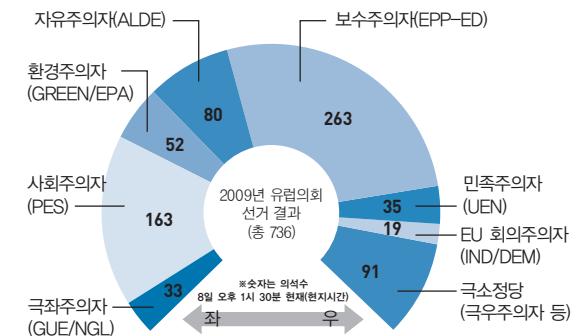
★ 2008년 아일랜드 리스본조약 국민투표 결과

찬성	46.6%
반대	53.4%

자료: EU 집행위원회

바호주 집행위원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정책들이 난관에 봉착하고, 대내외적인 여건이 유리하게 진행되지 않아 재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2009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 2004년 바호주를 지지하였던 EPD-ED(보수당-기독교민주당) 계열이 다수를 차지하여, 재임의 여건이 유리하게 진행되었다. 더욱이 회원국 정상들은 6월 19일 유럽이사회에서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을 차기 EU 집행위원장으로 지명하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하였다.

★ 유럽의회 의석 분포(2009년 6월 4~7일 선거 결과)



자료: European Parliament

바호주는 차기 임기 동안의 주요 정책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고용 창출, 금융감독 강화를 내세웠다. 그렇지만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이 재선임되기까지 2004년과 같은 반발이 없지는 않았다. 좌파 성향 및 녹색당 계열의 정치인들은 바호주의 지명에 반발하였고, 녹색당의 수장인 다니엘 콘-벤디(Daniel Cohn-Bendit)는 바호주의 정책이 경제, 환경, 민주주의에서 모두 실패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자유당 및 사회당 계열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였다. 벨기에 전 총리인 베르호프스타트도 바호주가 각국의 정책을 조율하는 차원을 넘어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호주를 반대하는 주요 논리 중 하나는 바호주의 집행위원회가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너무 느리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개혁센터(Centre for European Reform)의 소장인 찰스 그랜트(Charles Grant)는 강대국들이 자국의 조치를 확고히 진행하여 바호주의 집행위원회가 금융위기에 관해 취한 조치가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럽의회에서 바호주의 포르투갈 사민당이 속한 EPD-ED 계열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여, 결국 유럽의회에서 대부분의 PES(사회민주당-포르투갈 사민당은 사회민주당 그룹이 아님) 그룹이 기권한 가운데 바호주는 2009년 9월 16일 치루어진 재심임 투표를 통과할 수 있었다. 바호주는

향후 5년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지난 임기 동안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의견 조율에만 급급했던 참모형 리더십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바호주 재선임안 유럽의회 투표 결과(2009년 9월 16일)

찬성	382
반대	219
기권	117

자료: EU 집행위원회

한편 아일랜드에서 다시 치러진 리스본조약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조약이 비준되었다. 이는 EU가 리스본조약이 발효된 이후에도 아일랜드의 군사적 중립, 낙태를 금지하는 아일랜드 법률 조항, 그리고 아일랜드의 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보장을 해준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일랜드가 처한 심각한 경제난도 리스본조약의 비준에 영향을 주었다.

‘켈트 호랑이(Celtic Tiger)’로 불리며 고도의 경제성장을 구가하던 아일랜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은행들이 붕괴되고 실업률이 치솟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경제 안정을 위해 조약에 가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찬성표로 이어졌다.

★ 아일랜드 리스본조약 국민투표 결과(2009년 10월 3일)

총 유권자	3,078,032
총 투표 수	58.99% (1,816,636)
찬성	67.11% (1,214,270)
반대	32.89% (595,142)
무효	(7,244)

자료: EU 집행위원회

이제 리스본조약은 폴란드와 체코의 대통령 서명 절차만을 남기고 있어 실제로 거의 전 회원국에서 통과된 것과 다름없게 되었다. 바호주의 재심임과 더불어 아일랜드의 리스본조약 비준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EU의 정치적 통합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안성욱 한서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한-EU FTA와 자동차산업

Korea-EU FTA and its effects on their automobile industry

The debate over the automobile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during the Korea-EU FTA negotiation. EU's potential benefits from trade concessions and duty drawback are perceived to be limited since the main consumer market for European manufacturers is in Europe. EU negotiators urged their counterparts to amend and adopt motor vehicle technology standards which are equivalent to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 regulations. These debates became intense because of the significance that the automobile industry has in both of their economies' manufacturing sector and also due to a somewhat unbalanced perceived advantage as the number of EU cars sold in Korea is only a proportion of Korean cars sold in the EU.

한-EU FTA 협상 과정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분야는 자동차산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상품양허 협상에서도 자동차 부문의 관세철폐 기간에 대해 가장 마지막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EU 측이 요구한 유럽경제위원회(UNECE) 자동차 기술표준 도입 등도 핵심 쟁점이 되었다. 이는 자동차 산업이 한국과 EU의 제조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양측 간 교역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EU 자동차 시장의 특징

EU는 2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주요 5국이 전체 EU 자동차 판매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04년 이후 신규 가입한 동유럽 10개국은 2008년까지 빠르게 성장하면서 EU 자동차산업의 성장동력이 되는 듯하였으나, 최근에는 서유럽보다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전체 EU의 자동차 판매에서 동유럽의 자동차 판매 비중은 약 8%에 불과하다.

EU 자동차 시장은 소형차급(B세그먼트) 및 준중형차급(C세그먼트)의 비중이 가장 크다.¹ PSA 207, 폭스바겐 폴로, 피아트 폰토, 르노 클리오 등이 B세그먼트의 대표적인 모델이다. C세그먼트에서는 폭스바겐

의 골프가 다년간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이 외에도 포드 포커스, 오펔 아스트라가 많이 판매되는 모델이다. 최근에는 경기 침체에 기인한 소형 및 저가차 선호 현상 및 폐차 인센티브 지급 등에 의한 정책 효과로 인해 경차(A세그먼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EU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관련한 환경기준이 매우 까다롭다. 이는 EU 시장의 고유한 특징²인 디젤차의 보급률이 매우 높다는 점과 부합한다. 현재 EU 27개국 중 11개국이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연동되는 세제를 채택하고 있다.

EU는 경제적으로 통합이 상당히 진전되어 있기는 하나, 자동차산업에 있어서는 국가마다 기술표준 및 제도가 다른 경우가 많아 진출업체의 비용 부담이 높아져 진입이 까다로운 시장이다. 따라서 향후 EU 집행위원회는 과도한 규제나 국가별로 상이한 제도를 단순화하고 통일시키는 것에 역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EU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

한-미 FTA보다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

한국의 자동차산업에 있어서 EU와의 FTA 체결은 매우 의미가 크다. 일단 EU가 세계 최대의 자동차 생산 및 판매 지역이라는 점에서 한-EU FTA는 한-미 FTA에 못지않은 의미를 지닌다. 2008년 EU의 자동

¹ 한국과 미국 시장의 경우 중형차급(D세그먼트)이 최대차급임

² EU에서 매년 판매되는 자동차 중 반 이상(약 53%)이 디젤엔진 차량임

차 판매는 1,670만 대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에는 1,800만 대 이상 판매되었다. 즉, EU는 2007년과 2008년 각각 1,600만 대와 1,300만 대가 판매된 미국과 비교했을 때에도 200만 대 이상 더 큰 시장이다. 그리고 2008년 4/4분기를 정점으로 선진국의 자동차 수요가 급감하는 가운데 EU는 독일을 비롯한 주요국의 시기적절한 신차구매 지원정책을 통해 산업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유럽 시장에서 빠른 성장률을 보이며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어, EU가 조만간 미국을 능가하는 수출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입장벽 측면에서도 EU와의 FTA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미국의 경우 승용차 관세는 2.5%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FTA가 발효된 이후에도 관세철폐에 따른 실질적인 가격경쟁력 향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EU의 완성차 관세는 10%로 선진국 중에서는 높은 수준이며, 이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 자동차업체는 EU 시장에서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내 시장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EU와의 FTA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EU산 자동차의 점유율 및 소비자 선호도가 미국을 훨씬 앞서고 있다. 특히 최근 수입차 시장이 저배기량의 소형

차급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볼 때, 소형(B세그먼트) 및 준중형차급(C세그먼트)의 라인업이 다양한 EU 자동차업체들이 시장 개방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한-EU FTA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미 FTA보다 자동차 시장에 대한 파급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타결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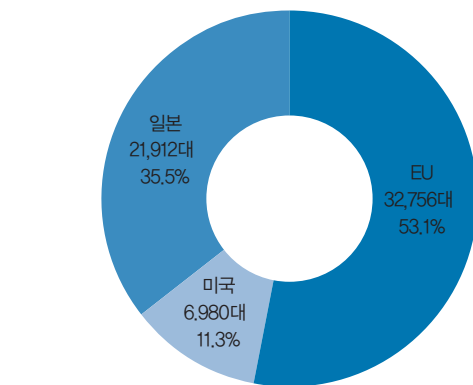
완성차 부문의 상품협상에서는 양국 모두 동등한 수준의 개방에 합의하였다. 이는 초반 협상에서는 크게 기대하지 못했던 점이다. 한-미 FTA 협상에서는 한국이 미국보다 현행관세가 3배 이상 높은 데도 불구하고 미국보다 조기에 관세 철폐를 완료하게 되어 있다.

★ 한-EU FTA 자동차 부문 관세인하 스케줄

구분		한국 시장	EU 시장
완성차	승용	1500cc 이하	5년간 단계적 철폐
	승용	1500cc 이상	3년간 단계적 철폐
	승용	1500cc 이상 SUV 디젤엔진차	5년간 단계적 철폐
	승용	5톤 이하	즉시 철폐
	승용	5~20톤	3년간 단계적 철폐
	승용	20톤 이상	5년간 단계적 철폐
자동차 부품		버스	즉시 철폐
		수출입 품목의 94%에 대하여 현행 3~19%의 관세 즉시 철폐 (나머지 5%는 3년간 단계적 철폐)	

자료: 곡용선, 김현정 (2009), "한-EU FTA의 자동차산업에 대한 영향 및 대응방향" (CEO Report),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 국내 수입차 시장의 원산지별 판매 구조



자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2008)

EU 측은 처음부터 한-미 FTA와 동등한 수준의 양허를 요구했기 때문에 한-EU FTA에서도 국내 시장이 EU 시장보다 빠르게 개방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또한 EU 시장은 관세가 다소 높기 때문에 5~7년의 관세 유예기간을 둘 것으로 예상되었다. 실제로 협상 초기에는 양측이 최장 7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는 양허안을 제시하였으나, 개방시기가 다소 앞당겨져 EU 자동차 시장이 3~5년 내에 개방되게 되었으므로 이는 한-미 FTA의 미국시장 관세인하





속도보다 빠른 셈이다.

안전기준에 대해서 협상 초기에는 EU 측이 EU 중심의 국제 기준인 UNECE 안전기준 120개 중 102개를 7년에 걸쳐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결국 부분적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의 형태로 절충하여 각 시장에서는 현지 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국내 시장에서는 부분적으로 UNECE 기준을 국내 기준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국내 시장에서 EU 자동차 업체는 42개 국내 안전기준에 의거하여 EU 측 기준 중 국내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16개 항목 중 7개는 유사기준으로 UNECE 기준을 준용하고, 9개는 국내 기준을 준수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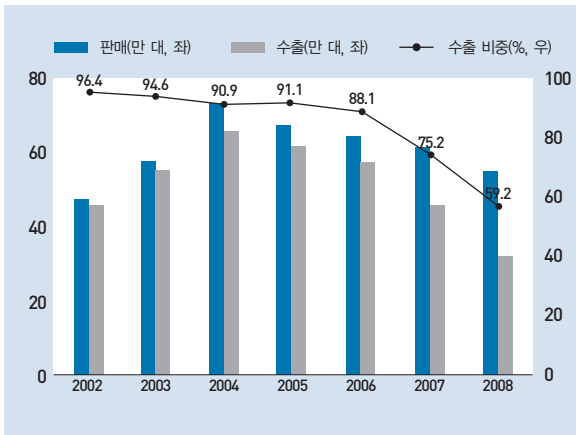
또한 EU가 국내 자동차 시장의 비관세장벽으로 지적되어온 배기가스진단(OBD) 기준³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Euro-V를 충족하는 차량에 한하여 연간 6,000대(메이커별 연간 1,000대)까지 유예하기로 하였으며, 2014년 이후에는 Euro-VI를 충족시키는 차량에 한하여 유럽기준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원산지규정은 EU 측의 당초 요구 수준인 50~70%보다 낮은 수준으로 합의되어 완성차의 경우 역내 부가가치 55% 이상(공장도가 기준), 부품은 역내 부가가치 50% 이상 혹은 세번변경 시 역내산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EU FTA의 효과

EU 시장에서 국내 자동차 업체의 판매는 2004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현지생산체제 구축 이후로는 수출이 더욱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최근 체코 공장 준공으로 향후 현지생산 물량이 증가할 전망이나 현지공장의 생산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내 업체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수

★ 국내 자동차 업계의 EU 시장 판매 및 수출 추이



자료: 광용선, 김현정 (2009), "한-EU FTA의 자동차산업에 대한 영향 및 대응방향" (CEO Report),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출이 절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EU와의 FTA는 EU 시장에서의 최근 수년간의 부진을 해소하고 나아가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협상 결과 한국 업체의 對EU 수출 주력 차급이 비교적 조기에 개방되어 수출 증대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에 한-EU FTA가 발효될 것으로 가정할 경우 1,500cc 초과 승용차에 대해서는 매년 3.3%씩 관세가 인하되어 2012년부터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상용차의 경우에는 EU 시장의 관세가 대부분 22%로 매우 높은데다가 주력 수출 차종이 대부분 3년 이내에 개방되는 품목에 속해 있어 향후 상용차 수출 증대 효과도 기대해볼 만하다.

또한 부가적인 효과로 부품관세가 즉시 철폐됨에 따라 국내 업체가 구축하고 있는 현지생산 체제에서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통한 경쟁력 강화 또한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EU의 유통 및 AS 시장 구조가 메이커별로 폐쇄적인 현재의 구조에서 향후 경쟁적인 구조로 개방되면 범용부품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품관세 철폐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과 맞물려 국내 부품업체에 시장 점유율 확대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내 완성차 시장은 EU산 자동차에 대해 3년 이내에 거의 완전 개방되면서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EU FTA가 2010년에 발효될 경우 1,5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는 2012년부터 무관세로 수입되게 되는데, 국내로 수입되는 EU산 자동차의 대부분이 1,500cc를 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자동차 시장은 3년 내에 전면 개방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미 FTA 발효 시 3년에 걸쳐 2,000cc 이상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현행 10%에서 5%로 축소되기 때문에 가격인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승용차의 경우 12.7%까지 가격이 인하되는데, 비교적 고가인 수입차의 경우 가격인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한-EU FTA가 한-미 FTA와 비슷한 시기에 발효된다면, 수입차의 가격인하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요컨대,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이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유럽 메이커들은 이처럼 중대형 프리미엄 브랜드 모델을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수입차 시장 내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와도 경쟁하면서 전체 수입차 시장 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전망

2009년 들어 EU 회원국 정부의 폐차 인센티브 등 자동차 수요 부양정책에 의해 침체되었던 자동차 판매가 상당부분 회복되었지만, 2010년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EU의 경기회복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시장을 부양함으로써 'Pull-Forward-Effect'에 의한 선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업 경기지표라고 할 수 있는 중대형 상용차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EU 경제가 아직 회복 국면에 진입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자동차 시장의 자생적 회복은 요원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게다가 독일을 제외한 주요국들은 이미 폐차 인센티브 연장 계획을 발표하였거나 향후 연

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유럽에서 가장 시장 규모가 큰 독일은 이미 폐차 인센티브가 종료되었으며 향후 실시 계획도 불투명해 2009년보다 판매가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0년도 EU 시장 판매는 2009년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⁴ 국내 자동차업체는 폐차 인센티브의 수혜자였던 만큼, 동 제도가 종료되거나 정책효과가 희석되어 자동차 판매가 급감할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내 자동차산업이 현재와 같은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EU FTA의 조속한 발효가 절실히 요구된다. ★

김현정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주임연구원

³ 현재 한국은 가솔린차의 경우 미국식 OBD를, 디젤차의 경우 유럽식 OBD를 장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미국 현지 생산물량이 거의 없는 일부 유럽 업체가 추가 생산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비관세장벽으로 지적되어 왔음

⁴ 글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ght)는 2010년 EU 시장 판매를 2009년보다 6.5% 감소한 1,377만 대로 전망





고부가가치화로 생존을 모색하는 EU 철강산업

EU's steel industry tries to survive by specialising in premium products

The EU's steel industry is one of its main industrial sectors along with mechanical engineering, vehicle construction, chemicals and electrical engineering. It accounts for 6% of total industry turnover in the EU-27 and each year it produces roughly 200 million tones of crude steel and currently 400,000 workers are employed in the region's economy. Europe's lead in the productivity will face a significant challenge from various emerging economies, especially from China, India and CIS countries where they can take advantage of economies of scale and low labour costs. It seems that linking the steel production with the premium products is the most viable strategy for the EU's steel industry to survive in the globalised economy

철강산업은 여전히 중요한 제조업 중 하나

철강산업은 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등과 더불어 EU의 주력 제조업 중 하나다. EU 27개국의 철강산업은 전체 제조업 매출의 약 6%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 산업구조가 상이해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철강산업의 비중이 EU 평균을 웃도는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매년 EU에서는 약 2억 톤의 조강이 생산되며, 약 40만 명이 철강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하류(downstream)공정과 리사이클링 등 철강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인력까지 고려한다면 철강산업의 고용효과는 훨씬 크다. EU 철강산업의 주요 고객은 건설(27%), 자동차(16%), 기계(14%) 등 3대 산업으로 전체 철강의 57%를 소비하고 있다. 이밖에도 철강 파이프 및 튜브 생산업체, 라디에이터 생산업체, 조선업체 등이 주요 거래처이다.

철강산업은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유럽의 주요 철강업체로는 아르셀로미탈¹(ArcelorMittal), 티센크루프(ThyssenKrupp), 타타코러스(Tata Corus), 리바(Riva) 등이 있는데, 이들은 과거 대규모 M&A를 통해 글로벌화한 기업이다.

서유럽 중심으로 철강산업 재편

1998~2007년에 EU 27개국의 조강생산 증가율은 전 세계 평균 증가율(6%)을 훨씬 밑도는 1%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저조한 증가율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소비시장²과 철강소비산업의 중요성 감소, 잘 구축된 사회간접자본에 기인한다. 이와 더불어 아시아 등 신흥국으로부터 저렴한 철강제품의 수입이 빠르게 늘면서 무역적자도 급증하였다. 지난 9년간 EU의 철강수입은 수출(연평균 4%)을 상회하는 연평균 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또한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철강소비의 감소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지난 9년간 EU의 GDP 증가율이 약 3%였던 반면, 철강소비는 2%에 불과하였다. 이는 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는 동안 철강소비산업의 중요성은 줄고, 철강 대신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세라믹 등의 사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EU의 조강생산은 서유럽과 동유럽 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지난 10년간 서유럽 15개국은 연평균 1% 남짓 증가해온 반면, 동유럽 국가들은 약 0.5% 감소하였다. 서유럽 철강업체들이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생산성 제고 노력은 물론 인력 감축과 저급 생산공정의 해외 이전 등에 박차를 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독일은 EU 27개국 중 전체 생산의 23%를 차지하는 최대 철

강생산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³ 반면 동유럽의 철강업체들은 EU 가입 이후 서유럽 경쟁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 상반기 중 철강생산이 43% 감소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자동차, 기계, 건설 등 여타 실물부문으로 확산되면서 유럽의 철강 생산량이 두 자릿수로 급감하였다. 2009년 상반기의 조강 생산량은 주요 철강 소비업체들의 생산 감축으로 전년동기 대비 43% 감소하였다. 주요 철강 소비업종인 자동차 생산은 약 40% 감소하였고, 기계산업의 생산량도 20% 감소하였다. 조선과 건설 산업의 생산은 약 10% 줄어들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철강산업이 바닥을 탈출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독일정부의 신차구입 보조금 제도와 각종 인프라 건설 프로그램에 따른 건설경기의 회복으로 티센크루프 등 독일 철강업체들은 생산량을 점차 늘리고 있다.

2009년 전체적으로 조강 생산량은 25%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0년에는 재고 확충에 힘입어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10년까지 EU의 조강 생산량은 위기 이전인 2008년의 중반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조강생산과 산업생산 간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고려할 경우 EU의 중기 조강생산 증가율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높은 경제성장으로 철강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아시아의 강한 성장 모멘텀을 고려할 경우 전 세계 철강생산에서 차지하는 EU의 비중은 2008년 15%에서 2020년에는 8%로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비록 세계 철강산업에서 EU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라도, 향후에도 EU는 자동차 생산, 기계 및 전기 엔지니어링 등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산업들에 힘입어 중

³ 독일의 조강생산은 1998년 4,400만 톤에서 2008년 4,580만 톤으로 소폭 증가하였음

요한 철강생산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경쟁우위 요소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에너지 효율화

앞으로 EU 철강업체는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한 중국, 인도, 브라질, CIS 등 신흥국 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이다. 이에 대응해 EU 철강업체들은 신흥국 시장 진출과 고부가가치제품(premium products)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최근 EU 철강업체들은 신흥국 시장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건비가 싼 지역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하고 있다. 독일의 티센크루프는 브라질에 500만 톤 규모의 제철소를 건설하기 위해 80억 유로를 투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EU 철강산업의 미래는 고부가가치제품에 특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선진국에서 자동차용 강판, 고강도 철강 등 특수강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EU 업체들은 이를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신흥국 경쟁업체들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철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고객 맞춤형 전략이 요구된다. 이런 맥락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효율화와 지속 가능한 환경이 철강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동인이 될 것이다.

한편 철강업체들은 개선된 생산방식으로 인해 예전보다 탄소배출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하지만 여전히 환경적으로 해로워 아이센히텐스타트(Eisenhüttenstadt)의 철강공장은 기존 용광로 시설을 가스 재활용 공정 기술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카를스루에(Forschungszentrum Karlsruhe) 연구 센터에 따르면, 이러한 신규 기술을 통해 기존에 비해 무려 50~60%에 이르는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신흥국 철강업체들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EU의 철강업체가 글로벌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¹ 아르셀로미탈은 현재 유럽 내 60개의 제철소에서 유럽 전체 철강의 55%를 생산하고 있음(전 세계의 약 8%)

² 세계 1인당 철강 소비량은 190kg인 반면, 유럽은 약 370kg





EU의 역내 국가보조제도

Critiques on European government's support programmes

The European Competition Commissioner investigated the situation of GM Europe's decision to sell its subsidiary Opel to Magna, a Canadian automobile component manufacturer, and the role of the German government in negotiations. The EC spokesperson announced in a press briefing that "the restructuring plan of GM Europe must be economically sound" and "any decision taken- and namely possible financial support by public authorities- must fully comply with the EU's state aid and internal market rules." This article provides an analysis on the main issues regarding the European countries' financial support programmes and the EC regulations.

EU 역내시장의 경쟁정책 감독당국인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독일 자회사 오펔(Opel)을 캐나다 자동차 부품회사 마그나(Magna)에 매각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EU 집행위원회는 "정부보조금제도 및 역내 시장원칙은 존중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GM 유럽의 구조조정은 이 기업이 미래 '건강한' 기업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건전한 조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¹ 결국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역내 단일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국 혹은 지역적 차원의 정부보조금제도가 자칫 회원국의 국내 이익을 중시하는 제도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EU 집행위원회의 이와 같은 입장은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에 다소 유연한 정책을 취했던 기존의 태도와는 다른 것이라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핵심 내용으로 언급되고 있는 EU의 국가보조는 어떤 제도인지, 또 그 주된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규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EU는 왜 회원국의 국내보조를 제한하는가?

EU의 국가보조금제도는 경쟁정책과 긴밀한 관계에 있

다. 이와 같은 양자관계는 EC조약의 구성에서도 알 수 있다. 즉, EC조약은 제Ⅵ편 「경쟁, 과세, 법률의 상호접근 등에 관한 공동규칙」에서 제1장 「경쟁에 관한 규칙」 속에 제1절 「기업에 관한 규칙」과 제2절 「회원국에 의한 보조」, 즉 국가보조(State Aids)에 대해 나란히 규정하고 있다. EC조약의 구성 형태를 보면, 유럽 역내 단일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만이 아니라 회원국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보조에 대한 규제가 함께 행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²

일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는 카르텔 금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및 기업결합의 규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경쟁정책과 법의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그러나 EU 차원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가 이뤄진다고 할지라도 만일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보조가 이루어진다면 EC조약이 지향하는 단일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는 유지될 수 없다. 그래서 EC조약은 역내시장에서의 교역 질서를 왜곡하는 회원국의 국내 산업 보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²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DG 'Competition')이 운영하는 아래의 사이트를 방문하면 '국가보조'와 관련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http://ec.europa.eu/competition/state_aid/overview/index_en.html)

¹ "EU, GM의 오펔 매각에 '건제구'", (2009. 9. 12.), 『연합뉴스』.

EU 역내 국가보조의 법적 근거: EC조약 제87조

EC조약은 국가보조에 대해 제87조, 제88조 및 제89조의 3개의 조항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국가보조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에 해당하는 것은 제87조이다.

EC조약 제87조는 1항에서 "회원국이 제공하거나 회원국 자원을 통해 제공하는 것으로서 특정 기업 또는 특정 상품의 생산에 특혜를 줌으로써 경쟁을 왜곡시키거나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지원 형태"를 금지보조금으로 간주하고 있다. 동조 동항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EC조약은 경쟁을 왜곡시키거나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지원 형태'(in any form)를 금지보조금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반대로 회원국의 어떠한 지원이 금지보조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제87조 1항을 통해 EC조약이 규정하는 금지보조의 내용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즉, EC조약상의 금지보조는 1)회원국이 제공하거나 회원국 자원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고, 2)특정 기업 또는 특정 상품의 생산에 대한 지원이어야 하며, 3)특혜를 주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4)경쟁을 왜곡시키거나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조가 만일 회원국 상호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한도 내에서 공동시장에 위배되면, EU 집행위원회가 규제를 가하게 되는 것이다. 위 1~4의 요건은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서도 규정되어 있는데, 금지보조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1)보조금의 존재 2)특정성 3)혜택이라는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과연 어떠한 지원이 국가보조에 해당하는가에 관한 것인가, 즉 첫 번째의 요건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 1963년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EU 집행위원회는 국가보조에 해당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였다. 즉, 국가보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접 보조금(Direct Subsidy), 세금이나 재정 부담의 면제, 준재정 부담(Parafiscal Charges)의 면제, 특별 이율(Preferential Interest Rates), 유리한

조건의 대부 보증(Guarantees of Loans), 토지나 건물의 무상 제공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 사업상 손실(Operating Losses)의 보전, 기타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조치들을 들고 있다. 이 외에도 금융 및 사회적 부담금 징수 연기, 국가의 직·간접 주식투자 참여, 비정상적으로 낮은 대가를 바라면서 공여하는 물품 또는 상업 지원 등도 국가보조에 해당한다.³ 다만, 이 목록은 예시에 불과하고, 국가보조 관련 여러 사례에서 유럽사법재판소(ECJ)도 별도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EC조약은 제87조 2항과 3항에서 예외적으로 국가보조가 인정되는 경우, 즉 허용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87조 2항에 의하면 다음의 3가지 경우에는 회원국 정부에 의한 보조금 지원이 허용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회원국의 EU 집행위원회에 대한 통지 등 별다른 조치 없이 자동적으로 보조를 할 수 있다.

1)개별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성격의 정부 지원. 다만 해당 제품의 원산지국에 대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

2)자연재해나 특수사정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지원.

3)독일의 분단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는 독일연방 공화국의 특정 지역경제에 제공하는 지원. 다만, 분단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을 보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어야 한다.

만일 회원국 정부가 지급한 지원이 위 3가지 보조금에 해당한다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를 규제할 별다른 권한이 없다. 다만 위 요건의 성격에 대한 해석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1)의 요건과 관련하여, '사회적 성격'(Social Character)에 해당되는 정부 지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합의된 원칙이 없다. 즉, 실업자, 영세민, 노인들에 대

³ 이준 (2008), 「EU법상 역내 국가보조의 규제에 관한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 논문, pp. 16-17.





한 사회부조 등이 ‘사회적’ 성격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2)의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특수 사정’ (Exceptional Occurrences)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급격한 경기침체 혹은 경제사정의 악화, 테러 등 국내 정치상황의 악화 등이 해당될 수 있겠으나 이 또한 일반적 목록은 확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리고 3)과 관련하여 독일의 분단에 따른 영향을 입고 있는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특정 지역경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마스트리히트조약, 암스테르담조약 및 니스조약에 의해 개정된 EC조약이 여전히 이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해 논의되었으며, 삭제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리스본조약에 의해 개정된 EC조약(공식 명칭은 「EU 운영조약」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은 제107조 2항 c)호에서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 즉, 현재의 내용은 그대로 포함시키되 다만 후단에서 “리스본조약 발효 5년 후 위원회의 제안에 의거하여 이사회는 동향을 폐지하는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현 EC조약 제87조 2항 c)호는 리스본조약이 발효되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EC조약 제87조 3항에 의한 재량적 허용보조에 관한 사항이다. 즉, 제87조 2항과 다른 점은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 국가보조는 일단 공동시장과 양립한다고 간주되지만 그에 대한 판단은 EU 집행위원회가 하게 된다는 것이다. 재량적 허용보조에 해당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생활수준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심각한 불완전 고용 상황을 겪고 있는 지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 2)유럽 공동의 이익이 되는 중요한 프로젝트의 실행을 촉진하거나 회원국 경제에 초래된 심각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 3)특정 경제활동 또는 경제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다만, 지원하더라도 공동이익에 배치되

는 정도로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4)문화 및 유산 보존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다만, 지원하더라도 공동이익에 배치되는 정도로 공동체 내 거래조건 및 경쟁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5)기타 이사회가 위원회 제안을 가중다수결로 의결함으로써 지정하는 정부 지원 형태

재량적 허용보조에 관한 위 요건들의 경우에도 그 내용과 기준이 모호하여 논란의 여지가 많다. 예를 들어 1)의 경우, 생활수준이 ‘비정상적으로’ (abnormally) 낮거나 ‘심각한’ (serious) 불완전고용을 들고 있지만 과연 생활과 고용이 어느 수준이 되어야 ‘비정상적’이고 ‘심각한’ 것인지 그 판단은 결국 EU 집행위원회의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이 외에도 2)의 유럽 공동의 이익이 되는 ‘중요한 프로젝트의 실행 촉진’이나 3)의 ‘특정 경제활동 또는 경제 분야의 발전 촉진’을 위한 조치도 오히려 회원국 간 혹은 회원국 내 지역 간 특혜 내지는 격차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5)의 ‘이사회가 가중다수결로 지정하는 정부 지원’도 문제이다. 물론 ‘위원회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만 이사회가 가중다수결로 의결하는 형태로 지원이 행해지지만 역외국(제3국)의 산업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특정 유럽 산업에 대하여 보조가 행해질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국가보조는 어떻게 규제되는가?

회원국에 의해 지원되는 국가보조에 대한 감시·감독을 하는 주무당국은 EU 집행위원회이다. 즉 위원회는 회원국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모든 정부지원 형태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하고(EC조약 제88조 1항 전단),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회원국에 제안하게 된다(EC조약 제88조 1항 후단). 만일 회원국에 의한 보조가 공동시장에 위배되거나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기한을 정하여 당해 보조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도록 결정한다(EC조약 제88조 2항 1단). 이 때,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국은 당해 회원국과

협의를 한다. 이 협의를 통해 당해 회원국은 자국이 지원하고 있는 보조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항변을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타결되지 못하면 위원회는 당해 보조를 폐지 혹은 변경하도록 결정하고, 이를 당해 회원국에게 통지한다. 당해 회원국이 국가보조를 제공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위원회는 그 통지에 대해 공동시장 위배 여부를 판단하고, 자신의 의견을 당해 회원국에 개진하게 된다. 위원회의 자체 검토 결과, 회원국의 조치가 공동시장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당해 조치의 변경 또는 폐지를 결정한다. 해당 회원국은 이 절차에 따라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조치안을 시행할 수 없다(EC조약 제88조 3항).

또한 위원회는 독자적으로 또는 기타 이해 관계가 있는 회원국과 함께 해당 회원국이 지정된 기한 이내에 이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해 회원국을 대상으로 ECJ에 의무불이행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EC조약 제88조 2항 2단).

위의 절차는 모두 위원회의 주도하에 진행된다. 하지만 EC조약 제88조 2항 3단은 ‘예외적인 상황’ (Exceptional Circumstances)이 존재하는 경우 회원국 보조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이사회 의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와 회원국 사이에 갈등 관계에 일종의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있다. 즉,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 회원국의 요청이 있으면 이사회는 ‘전원일치’로 당해 회원국의 지원조치가 공동시장에 위배되는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절차가 가지는 의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위에서 살펴본 위원회에 의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회원국이 이사회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자신의 입장을 통지할 때까지 해당 절차를 유예시키는 효과가 있다(EC조약 제88조 2항 3단). 그러나 이사회가 자신의 입장을 상기 신청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게 된다

(EC조약 제88조 2항 4단).

마지막으로, 국가보조 규제 절차와 관련한 이사회 의 규정 제정권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EC조약 제89조는 “이사회는 유럽 의회와의 협의를 거친 위원회 제안을 가중 다수결로 의결함으로써 제87조 및 제88조를 적용하기 위한 적절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제88조 3항의 적용조건과 본 절차가 면제되는 지원형태를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동조에 의거하여 이사회는 “EC조약 제93조(현 제88조)의 세부적용규칙을 정하는 1999년 3월 22일자 규칙 659/1999”⁴를 제정하였다. 그리고 위원회는 “이사회 규칙 659/1999를 이행하는 2004년 4월 21일자 규칙 794/2004”⁵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위 두 규칙이 시행됨으로써 회원국의 국가보조 규제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EU 국가보조제도의 시사점

1995년부터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세계교역 차원의 국제규범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EU의 경우, 로마조약이 발효한 1958년부터 이미 역내시장에서의 회원국의 국가보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었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일부 규정의 내용이 모호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EU는 공동시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가

⁴ Council Regulation No 659/1999 of 22 March 1999: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Article 93 (now Art.88) of the EC Treaty* (OJ L 83/1), 27.03.1999, p. 1-9.

이 규칙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Amendment of Article 1(b)(i) of Council Regulation no 659/99 by Act of accession of Czech Republic, Estonia, Cyprus, Latvia, Lithuania, Hungary, Malta, Poland, Slovenia and Slovakia, Annex II, 5 (6), OJ L 236, 23.09.2003, p. 344; Amendment of Article 1(b)(i) of Council Regulation no 659/99 by Council Regulation (EC) No 1791/2006 of 20 November 2006, by reason of the accession of Bulgaria and Romania, OJ L 363, 20.12.2006, p.27.

⁵ Commission Regulation (EC) No 794/2004 of 21 April 2004 implementing Council Regulation (EC) No 659/1999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Article 93 of the EC Treaty, OJ L 140, 30.04.2004, p. 1-134. 이 규칙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보조에 관한 적절한 규제를 통하여 독자적인 경쟁법 질서를 유지·발달시켜오고 있다.

현재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EU는 ‘확대 피로감’ (enlargement fatigue)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리스본조약을 제정함과 더불어 인접 국가들을 가입시키기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2010년 초 리스본조약이 발효되면 EU의 확대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문제는 역내시장이 확대되면 될수록 단일한 법 체제하에서 공정경쟁을 요구하는 EU 당국과 EC조약 제87조에 의거한 국가보조를 둘러싼 회원국 간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EU 집행위원회는 개별 산업 정책 분야별로 이를테면 재정, 브로드밴드(broadband), 방송, 석탄, 전기, 포털 서비스, 선박, 철강 분야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적용하고 있다.⁶ 한-EU FTA 협정이 발효되면, 유럽 역내시장에서의 국가보조제도는 한국기업의 이해와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연구가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

채형복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⁶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http://ec.europa.eu/competition/state_aid/legislation/specific_rules.html> 참조

유럽인의 행복의 조건

What makes Europeans happy?: A search for Europeans’ ‘joie de vivre’

We saw two contradicting social events in France in the past month with a wave of suicides at France Télécom and a backing of France’s president Nicolas Sarkozy to adopt a Gross Domestic Happiness (GDH) index to measure the quality of life (‘joie de vivr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nstead of economic performance oriented Gross Domestic Product (GDP). Then which measurements will be included in this index? Europeans chose family relationship, education, health, quality of public services, and equality of incomes as key components.

최근 프랑스에서는 두가지 역설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한편에선 2004년까지만 해도 프랑스 최대 국영 통신회사였던 프랑스 텔레콤 직원들의 연쇄적인 자살이 이어지고 있고, 다른 한편에선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국가의 경제 수준을 측정하는 경제지표로 ‘GDP(국내총생산)’ 대신 삶의 질과 지속 가능 발전을 고려한 ‘행복지수’의 활용을 제안하고 나섰다.

특히 유럽 3위의 통신사이자 유럽 최대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프랑스 텔레콤에서 지난 19개월 사이 24명의 직원이 자살하고 13명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¹ 이에 대한 원인을 민영화 이후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주 35시간 근로제와 질 높은 복지혜택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 프랑스에서 발생한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유럽인들의 삶에 대한 행복과 만족도를 특징짓는 요소가 무엇인지, 소득증대와 같은 경제적 성취와 행복 간의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인지에 관해 의문을 갖게 한다.

¹ France: Stress and worker suicides mean the future’s not bright at Orange. (2009. 9. 18.), Guardian. <<http://www.guardian.co.uk/world/2009/sep/18/france-telecom-suicides-orange-bullying>>

GDP와 행복지수

사르코지가 제안한 ‘행복지수’는 경제 활동의 양적인 면만을 중시하는 GDP 위주의 개념이 환경악화나 경제적 외부효과, 가족 문제 등은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휴가 일수와 평균 기대수명, 의료 서비스 수준과 환경 보호 수준 등의 추가적인 지표를 포함한다.

유럽에서의 이와 같은 GDP 대체 시도가 처음은 아니다. 영국 보수당 당수인 데이비드 카메론은 당 집권 초기에 국가생산총량만 따지는 허구적인 GDP 대신 GWB(general well-being)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영국 신경경제재단(NEF)도 해마다 삶에 대한 만족도, 평균 기대수명과 환경오염 지표 등을 평가해 국가별 국민행복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도 2003년부터 사회적 통합을 위해 ‘삶의 질’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유럽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

2009년 3월 Eurofound²가 발표한 ‘유럽인의 삶의 질에 관한 조사(EQLS: 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에 따르면 유럽인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 및 행복도는 회원국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³ 불가리아

² 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는 2003년과 2007년 2차례에 걸쳐 진 행되었고, Eurofound는 2009년에 두 조사를 종합한 결과물을 출판하였다. <<http://www.eurofound.europa.eu/index.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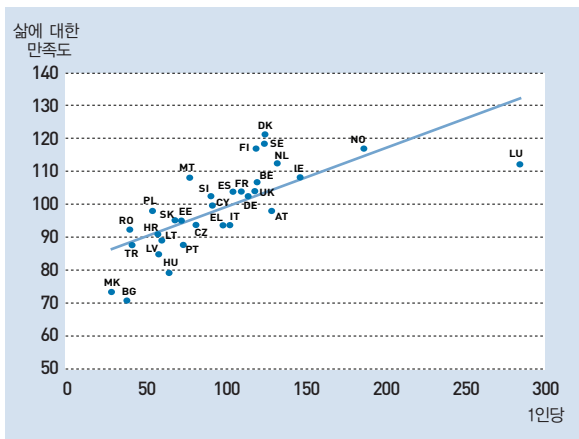




를 제외한 EU 회원국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EU 15개국(2004년 이전 회원국, 이하 EU 15)의 만족도가 신회원국인 12개국(2004년 이후 회원국, 이하 NMS(New Member States) 12)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신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몰타와 슬로베니아는 EU 15의 평균 만족도와 같거나 더 높았으며, 반대로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의 남부 회원국들은 NMS 12의 평균에 보다 가깝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불가리아(5.0)가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고, 핀란드(8.2), 스웨덴(8.3), 덴마크(8.5)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국가군에 속한다.

아래 그림은 유럽 31개⁴ 국가들의 GDP와 삶에 대한 만족도의 관계를 보여주며, 두 지표는 큰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 국가별 1인당 GDP와 삶에 대한 만족도⁵



주: GDP는 Eurostat 자료를 삶의 만족도는 EQLS 자료를 참조
자료: Eurostat; Eurofound (2009), 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p.16.

³ 조사는 10점 척도로 1점을 매우 불만족, 10점을 매우 만족으로 보았다. 평균적으로 소득이나 고용 여부 등과 같은 사회 경제적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족도(7.0)에 비해, 보다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 좌우되는 행복도(7.5)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Eurofound (2009), 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p. 15).

⁴ 27개 EU 회원국과 크로아티아, 전 유고슬라비아 공화국, 터키의 3개 EU 후보국 및 노르웨이를 말한다.

⁵ GDP와 만족도는 모두 상대적인 수치로 GDP는 EU 27=100을 기준으로 하며, 만족도는 1에서 10까지 척도 중 1은 매우 불만족, 10을 매우 만족으로 보았다.

위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총생산량의 증가가 삶에 대한 만족도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럽 31개 국가가 아닌 경제적으로 발전한 EU 15만 놓고 보았을 때는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실제로 EU 15와 노르웨이의 GDP와 평균 만족도 간 상관관계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덴마크와 같은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의 국민이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소득 수준이 낮은 불가리아는 만족도가 낮았지만, 아일랜드와 그에 비해 소득 수준이 2배 높은 룩셈부르크의 삶의 만족도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국가의 소득 수준과 개인의 행복감 사이에 어느 시점까지는 비례 관계가 성립하지만 일정 수준을 지나면 소득이 높아져도 행복도가 더 높아지진 않는다는 ‘이스털린의 이론(Easterlin Paradox)’⁶과 일치한다.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무엇이 유럽인들을 행복하게 하는가.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가족생활, 교육, 생활 수준, 주거 및 건강 등을 행복을 결정짓는 주요소로 꼽았다. 특히 EU 15에서는 가족생활과 함께 사회활동도 행복의 필수조건이라고 보는데 반해 NMS 12에서는 가족생활이 훨씬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인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 역시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와 스웨덴 국민의 4분의 3 이상이, 그리고 31개국 중 24개국이 보다 낙관적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EU 15 중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3개국과 NMS 12 중 체코, 불가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은 미래에 대해 보다 회의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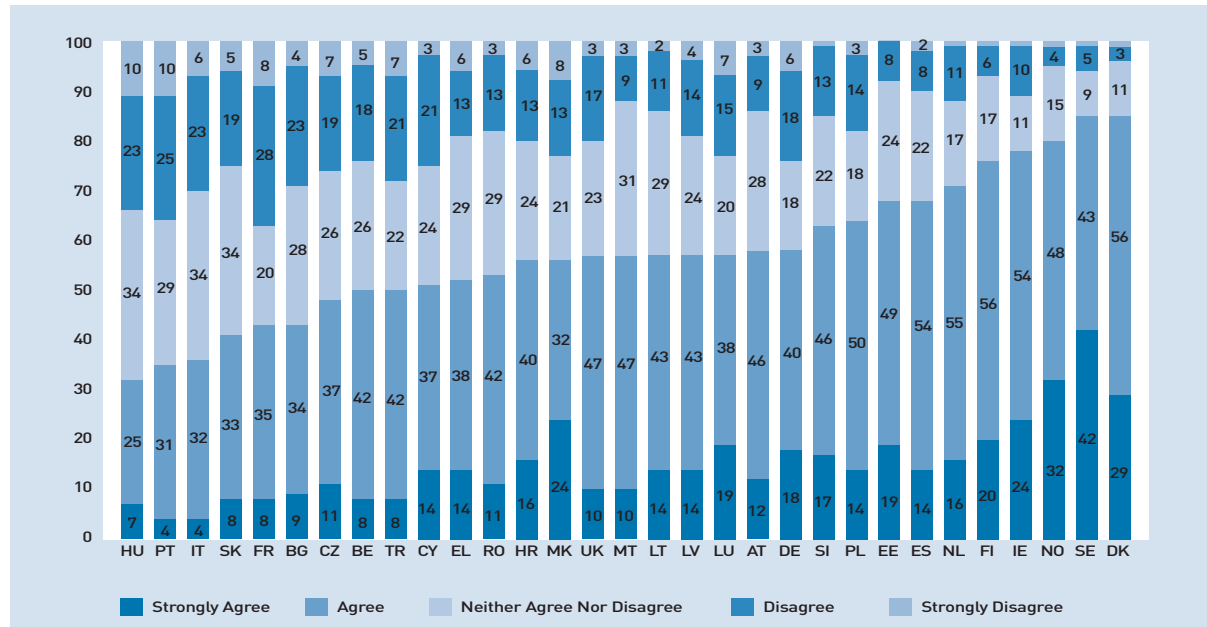
유럽 각국의 소득 격차와 함께 물질적 상실감(material deprivation) 역시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

⁶ Easterlin, R.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⁷ 6가지 요소는 적절한 주택 난방, 연차 휴가, 새 가구 구입, 이틀에 한 번 고기를 포함한 식사, 새 의류 구매 및 집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수단이다.

★ 국가별 미래에 대한 낙관(optimism)

(단위: %)



자료: Eurofound (2009), 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p. 20.

로 볼 수 있다. EQLS가 2007년 유럽 31개국을 대상으로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6가지 필수상품⁷을 조사한 결과 EU 15의 시민들은 그중 한 가지 이하가 부족하다고 답한 반면, NMS 12는 2개 이상을, 후보국들은 3개 이상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물질적 상실감의 격차는 회원국 내에서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루마니아에서는 하위 25%의 빈곤계층이 6가지 필수품 중 4가지가 부족하다고 답한 반면, 상위 25%의 부유계층은 그중 한 가지만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스웨덴에서는 국내 격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NMS 12와 후보국의 부유계층이 몇몇 EU 15(덴마크, 스웨덴,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의 빈곤계층보다 더 큰 물질적 상실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회원국 간 격차가 국내 격차보다 여전히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건강에 대해서는 유럽인의 81%가 행복의 필수조건이라 보았다. 그러나 유럽인들은 실제 건강 측면에서 회원국 간 및 회원국 내 차이를 보였는데, EU 15가 NMS 12보다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 정도가 높고 부유할수록 더 건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직장에서의 업무환경 또는 직장 전환의 유연성 정도 같은 사회환경도 만족도를 결정짓는 요소로 볼 수 있다. 덴마크,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의 노동자들은 보다 유연하고 자유화된 복지와 고용체제로 직업을 쉽고 자유롭게 전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몰타 시민의 42%가 한 직장에서 평생 근무한 반면, 덴마크 시민은 6%만이 동일한 고용주와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유롭고 안전한 직업 전환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이는 ‘flexicurity’로 대변되는 덴마크의 유연하고 자유로운 복지 시스템과 철저한 사회보장제도의 조화로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사회통합을 위한 빈곤 감소와 삶의 질 개선은 EU 정책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이다. 위와 같은 회원국별 소득과 행복도의 차이를 고려할 때, 삶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의 가정과 고용의 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EU 차원의 조화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고주현 연세-SERI EU센터 Post-Doc. 연구원



2020년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이루기 위한 EU의 노력

Europe's efforts to meet its 2020 renewables targets

The Centre for European Reform published a new policy brief “How to meet the EU’s 2020 renewables targets” written by Stephen Tindale. The EU member countries have agreed to reduce overall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by 20% and derive the matching energy needs from renewable sources by 2020. The author points out that the renewable energy sources are more secure and cheaper than the fossil fuels and also that the cost of failing to control climate change is much greater than the cost of managing it.

유럽개혁센터의 스티븐 틴데일은 <EU가 202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안은?>이라는 정책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EU는 2020년까지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탄소 방출을 20% 줄이고, 재생에너지 활용 및 사용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그는 보고서를 통해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보다 더 싸고 안전한 미래형 에너지이며, 앞으로 쓰게 될 기후변화를 되돌리기 위한 비용은 미리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쓰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는 현재 총 에너지 필요량의 8.5%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을 20%까지 높이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기후변화를 통제하고, 에너지 안보를 높이며,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을 창출시키는 등 EU에 다방면의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이 목표는 EU 정부가 재생가스 및 전력 사용 증가를 도모하고 재빠르게 전력수송망(인프라)을 구축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

재생에너지란 단순히 재생전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재생에너지 목표는 재생전력 사용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기에, 정부는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와 같이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의 사용에 집중해야 한다. 바이오매스는 EU에서 가장 중요한 재생에너지원 중 하나로 작물, 버려진 목재, 나무 조각 등을 열과 전력의 자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바이오매스라고 해서 모두가 환경 측면에서 항상 좋은 것은 아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

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바이오가스는 오물, 비료, 농업 쓰레기 등으로부터 가스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차세대 바이오 연료로써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는 것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도전과제이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사용자 간의 인프라를 확장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EU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력망의 급속한 확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EU는 기후에 악영향을 미치는 지출 및 지원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공동농업정책(CAP)에 따라 바이오연료 생산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주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조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몇몇 바이오연료는 가솔린보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앞으로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은 온실가스의 방출 여부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예로 가축업과 같은 탄소 방출 집약적 형태의 농업에 대한 지원은 중단해야 하며, 화학비료의 사용은 줄여야 한다.

1997년 EU 집행위원회의 보고서 <미래를 위한 에너지: 재생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EU의 정책에 버금가는 기반이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01년 재생에너지 법령이 채택되었으며, 법령은 2010년까지 총 에너지 사용의 12%, 총 전력소비의 22%가 재생에너지로 쓰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EU는 재생에너지를 그다지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8년 에너지 소비 중 특정

비율은 반드시 재생에너지여야 한다는 법령이 실행된 이후, 개별 국가의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출발점과 소득에 따라 회원국별로 서로 다른 목표가 마련되었다. 부유한 국가일수록 더 높은 목표가 빈곤한 국가인 경우는 낮은 목표가 설정되었는데, 한 예로 스웨덴의 경우는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49%까지 높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한 반면 헝가리는 13%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한편 1997년 EU 집행위원회의 보고서 발간 이후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가장 큰 증가를 보인 재생에너지는 바이오매스로 1997년 3.5%에서 2007년 5.4%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상대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풍력에너지가 가장 급속히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 풍력에너지는 EU 에너지 요구량의 0.5%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1997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10배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 10년 동안 재생에너지 사용 능력이 가장 크게 증가한 나라는 독일이다. 1996년 총 EU 재생에너지의 절반 이상은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7년에는 절반 이상이 프랑스, 스웨덴, 독일, 스페인에서 사용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총 에너지 사용 중 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을 살펴보면, 2007년 스웨덴이 31%로 가장 높았고, 라트비아 30%, 오스트리아 24%, 핀란드 23%, 독일 8%,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각각 7%를 기록하였다.

2007년 EU의 전력 소비를 살펴보면 총 사용량의 16%가 재생에너지로 발전되었다. 2010년과 2020년까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영국 6개 강대국의 성과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회원국들 중 풍력, 태양력 에너지의 급속한 성장을 달성한 나라(독일, 스페인, 덴마크)는 전통적인 에너지원에 비해 비용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는 재생에너지에 대해 높은 가격을 보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투자자에게 더 높은 성과를 보장하고 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여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였다. 독일과 스페인의 경우,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20년 동안 고정가격구매제도(Feed-in tariff)

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으며, 독일은 1990년대 태양광 패널과 같이 소규모의 재생에너지의 투자를 확산시키기 위해 고정가격구매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한편 고정가격구매제도의 대체안인 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에너지 기업이 전력의 일정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충족할 것을 의무적으로 정한 것으로, 발전량이 아니더라도 일정 용량의 발전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2020년 EU의 재생에너지 목표는 재생에너지 생산부문과 분배부문(에너지 소비자에게)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때, 달성될 수 있다. 재생에너지는 단순히 재생전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EU는 재생전력 이외에도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등의 재생에너지원 사용비용을 높일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 중 재생에너지원과 에너지 소비자 간의 수송연결망(인프라)을 확장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스웨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의 중요성과 함께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수송망 조직)의 확장을 재차 강조했다. EU는 범유럽 에너지 네트워크 가이드라인(TEN-E)하에 북해와 남부 유럽 및 북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전력수송망에 대한 재정을 지원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자료: Tindale, S. (2009). How to meet the EU's 2020 renewables target, Centre for European Reform.) ★

이지혜 삼성경제연구소 리서치 애널리스트



제3회 EU Core Circle Society 세미나 The 3rd EU Core Circle Society Seminar

The Yonsei-SERI EU Centre held the third EU Core Circle Society on the 7th of October.

This event provided an important venue for examining the current economic climate of Europe as we are seeing signs of world economic recovery, mainly thanks to economic stimulus policies of governments from around the world. Various forecasts show that the economic worst may be over yet a rise in bank vulnerability, unemployment rate and government budget deficits are expected to be main risks for the region.

Dr. Deuk-Kap Kim, the director of Global Studies Department at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gave an insightful lecture on “The future of the EU economy after the global economic crisis” where he provided a thorough analysis of the current crisis and an outlook on the region’s economy. It was followed by a discussion and the participants shared their views on the effects of Europe’s different future performances on the world and the Korean economy.

지난 10월 7일 연세-SERI EU 센터는 제3회 EU Core Circle Society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09년 하반기 이후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고, EU 경제도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은행 부실, 실업률 상승, 정부 재정적자 확대 등 여러 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경제의 향방>이라는 주제로 삼성경제연구소의 김득갑 연구전문위원을 모시고 위기 이후 EU 경제의 현황 및 향후 전망을 듣고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주는 영향과 시사점을 함께 논의하였다.

